

6·25전쟁의 승패인식 재조명*

한 관 수**

1. 서 론
2. 전쟁의 승패에 대한 인식 및 평가요소
3. 6·25전쟁의 도발주체와 승패 평가요소
4. 6·25전쟁의 승패 평가요소별 분석
5. 결 론

1. 서 론

6·25전쟁이 멈추자 양측은 각각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그들이 “남한의 북침을 저지했고, 세계 최강의 미국에게 역사상 첫 패배를 안겨준 전쟁”임을 자랑했다. 반면 남한의 이승만은 “북한의 남침을 물리치고, 남한 정부의 전복을 막았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라고 주장했다.¹⁾

* 이 논문은 2011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교수

1) 양영조·남정옥, 『알아봅시다! 6·25전쟁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2쇄), p.146.
: United State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Symington*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6·25전쟁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전문연구서 및 논문들은 “6·25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이었다.” 또는 “6·25전쟁은 무승부의 전쟁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²⁾ 대부분의 일반 국민도 그 같은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6·25전쟁의 무승부 이론’은 국내·외에서 정설(established theory)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존의 ‘무승부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2011년 초에 발간·배포된 『2010국방백서』(이하 국방백서)의 내용이 그것이다. 국방백서는 이제까지의 통설과 다르게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라는 주제로 6·25전쟁의 성격과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으로 국제전이면서 내전(內戰)과 같은 성격의 전쟁’이었다.”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지만 대한민국이 유엔 참전국과 함께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한 ‘세계자유수호전쟁’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전쟁’이었다.”³⁾

국방백서의 내용은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기해 6·25전쟁에 대한 평가를 역사적 차원에서 접근해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그것은 곧 ‘6·25전쟁의 결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가 변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초로 기존의 ‘무승부’ 이론을 뛰어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새로운 해석은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해 6·25전쟁 전문연구자들조차도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Hearings vol.Ⅱ Parts 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71, pp.1519~1524.

2)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p.21, 703.

3) 국방부, 『2010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10, p.249.

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도 기존의 ‘무승부’ 이론이 그대로 교육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올바른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전문연구자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후세에게 교육되지 못 한다면 그것은 한낱의 스쳐가는 구름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새롭게 평가된 내용을 국방백서의 부록에 슬쩍 끼워 넣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연구자들에게 적극 알려 학계의 활발한 토론과 검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과 검증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국민과 후세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다.⁴⁾

본 연구는 그 같은 맥락에서 6·25전쟁 이후 미국이 치른 베트남전쟁과 걸프전 및 이라크전쟁의 사례를 통해 6·25전쟁이 무승부의 전쟁인지, 또는 승리한 전쟁인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베트남전쟁·걸프전쟁·이라크전쟁의 사례를 제시한 후 전쟁의 승패인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요소를 선정할 것이다. 이어 제3장에서 제시된 6·25전쟁의 도발주체와 승패 평가요소의 영향을 반영해 제4장에서 6·25전쟁의 승패인식에 대해 선정된 평가요소를 적용 단기적·장기적,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전쟁의 승패에 대한 인식 및 평가요소

1) 전쟁의 승패 인식의 사례

전쟁의 승패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부분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강화조약, 또는 휴전 등으로 전쟁이 마무리된 후 내려지는

4) 국방백서의 해당부분을 집필했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변화된 6·25전쟁의 평가에 대해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연구나 발표는 계획되어 있지 않다.”며 “학계연구자들의 활발한 토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⁵⁾ 그러나 전쟁은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가와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이기 때문에 전쟁이 종결되었다하더라도 그 파급효과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연원이 되었던 지난날의 전쟁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재평가하게 되면서 승패의 판정이 엇갈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종전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승패에 대한 판정 또는 인식의 변화가 생긴 대표적인 전쟁으로 미국이 주도했던 베트남전쟁(1965~1973)과 이라크전쟁(2003)을 꼽을 수 있다. 걸프전쟁(1990~1991)도 유사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사례들은 모두 미국이 주도한 전쟁으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이 우리의 현실과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6·25전쟁의 승패인식을 재조명하는데 관련되는 내용 위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베트남전쟁의 경우

1965년 7월, 존슨 미국 대통령은 전투병력을 대거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베트남전쟁의 미국화(Americanization of the Vietnam War)’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때부터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베트콩 및 북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을 굴복시키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은 1968년 1월 31일 시작된 베트콩과 북베트남의 ‘땃(Tet)공세’⁶⁾를 계기로 다시 ‘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Vietnamization)’로 선회했다.⁷⁾ 전쟁을 남베트남 정부가 주도하고 미국은 지원한다는 개념이었다.

그때부터 미국은 베트콩과 북베트남을 굴복시키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명

5) 전쟁의 종결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최복진, “사례를 통해 본 전쟁종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박영준, “전쟁의 종결과 영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2007. ; 구영록, 『인간과 전쟁: 국제정치이론의 체계』, 법문사, 1977, pp.168~180.

6) 땃(Tet)공세 : 1968년 1월 31일,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에 의해 남베트남 전역에서 감행된 전면공세를 말한다. 과거에는 음력 설날 공세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구정(舊正)공세’로 불렀다. 땃(Tet)란 베트남어로 설을 뜻한다.

7)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94~109.

예로운 철수전략을 추구했다. 북베트남과 평화협상은 1968년 5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본회담이 열렸지만 미국의 의도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북베트남을 적극 지원하고 있던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당시 미국은 6·25전쟁에 개입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후 그들을 대륙에 가두는 봉쇄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⁸⁾ 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 화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971년 ‘핑퐁외교’를 시작으로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수교의 길을 텃다.

미국의 거둬들인 양보로 평화협정은 1973년 1월 27일, 유엔 사무총장의 입회하에 조인되었으며, 1월 28일 08:00부(현지시간)로 발효되었다. 평화협정의 발효에 따라 미국의 개입으로 10년 가까이 계속되었던 제2차 베트남전쟁(항미전쟁)은 막을 내렸다. 그해 3월까지 남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되었던 미군 등 우방국의 군대는 모두 철수했다. 그때부터 베트남과 북베트남을 상대로 하는 전쟁은 남베트남 정부의 몫이었다.⁹⁾

여기까지 상황으로만 본다면 미국은 베트남과 북베트남을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반면 협상과정에서 그들에게 많은 양보를 했지만 일단 평화협정이라는 장치를 마련 한 후 철수했다. 따라서 미국이 패배한 것도 아니다. 또한 미국은 “남베트남을 기지로 삼아 중국대륙을 봉쇄한다.”라는 전략을 변경하긴 했지만 중국과 화해한 마당에 그들에 대한 봉쇄전략도 어차피 수정되어야 했다. 따라서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을 굴복시킨 것과 평화협정으로 철수한 것을 비교해 본다면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무승부’ 정

8) 중국은 1950년 10월 19일, 한반도의 6·25전쟁에 개입한 후 그해 10월과 11월 2차례의 공세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출한 국군과 유엔군을 38도선까지 패퇴시키고, 이어 12월 말 제3차 공세를 감행해 서울을 점령한 후 평택~삼척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했다. 중공군의 엄청난 파괴력에 놀란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중국과 휴전을 모색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진영의 제안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자유진영은 낙담했지만 제8군사령관 린치웨이(Matthew B. Ridgway: 1895~1993) 장군의 썬더볼트(Thunder Bolt)작전 성공으로 수원을 연하는 선을 회복하면서부터 한반도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았다. 그리고 중국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결의했다. 그것이 1951년 2월 1일, 유엔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후 대륙봉쇄정책을 강화하게 된 배경이었다.

9) 최용호, 『물어보세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33~35.

도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했다.

그러나 미군과 자유진영의 연합군이 철수 한 후 2년이 지난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이 베트남과 북베트남에 의해 점령되고 말았다. 그러자 미국이 수행했던 베트남전쟁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 무승부가 패배로 굳어진 것이다. 그때부터 “6·25전쟁은 미국이 무승부를 기록한 최초의 전쟁이었으며, 베트남전쟁은 최초의 패배를 기록한 전쟁이었다.”는 평가가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베트남전쟁의 사례와 같이 전쟁의 승패에 대한 평가는 전쟁이 끝나거나 또는 멈추어진 시점의 평가와 일정시간이 지난 후 전후복구 등의 상태를 감안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즉, 전쟁의 승패에 대한 평가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베트남전쟁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전쟁과 미국에 대한 평가는 또 다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베트남은 공산화통일 이후 1978년 캄보디아 점령, 1979년 중국과 전쟁에서 승리 등으로 군사적 위세를 과시했지만 그로 인해 고립주의를 자초하게 되면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후 베트남은 1986년 12월, 당시로서 혁명적인 도이머이(Doi Moi) 정책을 채택해 개혁·개방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이어 베트남은 1995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제 미국은 베트남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달러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베트남이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의 투자와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하면서 미국에게 씌워진 ‘역사상 최초의 패배’라는 굴레는 벗겨질 수 있는 것인가? 현재까지 그 같은 평가는 논리의 비약이 될 것 같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2) 걸프전쟁의 경우

1990년 8월 2일 02시,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기습 침공해 07시경 쿠웨이트시티의 정부청사와 왕궁을 점령했다. 이어 이라크는 8월 28일, 쿠웨이트 임시정부와 합의에 따라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편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라크가 같은 이슬람국가인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물론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이슬람국가를 침공한 적은 있었다. 그는 아랍국가의 맹주를 자처하며 1980년 9월, 동쪽의 이란을 침공해 8년간의 전쟁을 치렀다. 두 나라는 민족과 종교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슬람국가이긴 했지만 수니파인 후세인과 달리 시아파를 믿으며, 인구의 97%가 페르시아족 등 비 아랍계였다.

후세인은 1988년 유엔의 중재 하에 이란과 정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전쟁의 후유증이 엄청났다. 800억 달러의 부채와 엄청난 국방비, 42만여 명의 인원 손실은 후세인 정권의 존립을 위협했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는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에 240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 쿠웨이트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쿠웨이트가 석유수출기구(OPEC)의 협정을 무시하고 더 많은 석유를 채굴하면서 유가하락으로 130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으며, 국경부근의 유전에서 24억 달러어치의 석유를 도굴해갔다고 강변했다. 그로인해 수차례의 국경분쟁이 발생했으나 쿠웨이트의 국민과 정부는 계속되는 이라크의 도발에 둔감해져있었다. '양치기 소년의 늑대소동'과 같은 격이었다.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기습 점령하자 유엔은 이라크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즉각 발표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라크 응징에 적극 나섰다. 미국, 영국의 파병결정과 함께 이집트, 터키, 모로코 등 이슬람국가의 파병결정이 줄을 이었다.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점령한 후 '아랍민족주의'와 '석유자원'을 무기화해 대항할 경우 유엔과 미국이 쉽사리 개입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그의 행위에 대해 “목표는 쿠웨이트, 목적은 이스라엘”이라고 천명하며 자신의 군사행동을 ‘반 이스라엘, 반미 대결’로 몰아가려했다. 그러나 아랍국가들이 이라크 응징에 참가하면서 후세인의 구도는 무너지고 말았다.

후세인은 지지세력 구축을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9월 10일에는 앙숙이었던 이란과 재 수교(修交)에 합의했다. 미국의 걸프만 진출을 견제한다는 공동의 이해 앞에 과거의 원한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국제관계에서 이 상보다 현실적인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지상군이 1991년 2월 14일 공격을 시작했으나 이라크군의 저항은 미미했다. 지상군이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을 계속하자 2월 25일 후세인은 항복을 선언하고, 유엔의 중재를 요청했다. 이어 파월 미 합참의장은 부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다.”고 보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2월 28일 08시부로 종전을 발표했다. 다국적군이 후세인 정부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바그다드 진입 직전에 멈춘 것은 후세인을 제거할 경우 아랍민족주의를 자극할 우려와 이란의 호메니를 견제할 구심점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¹⁰⁾

걸프전쟁과 같이 상대의 심장부를 점령하지도 않고, 전쟁지도부를 제거하지도 않은 채 종결한 전쟁도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이다. 쿠웨이트의 원상회복이라는 전쟁의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후세인의 응징을 주장하는 일부 강경파는 반쪽짜리 승리라며 부시 대통령의 전쟁지도를 비난했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부시 대통령의 전쟁지도와 걸프전쟁의 승리는 더욱 빛을 발휘하고 있다.

(3) 이라크전쟁의 경우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발생한 9·11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응징한데 이어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시작

10) 송인영, 「5사(事)7계(計)로 본 걸프전쟁의 평가 및 분석」, 『군사 제4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203~213.

했다. 후세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정예의 이라크 군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100만 명이 넘는 이라크군을 단숨에 격파하고 불과 20일 만인 4월 9일 바그다드를 점령했다. 이어 후세인의 추종자들을 제거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5월 1일 종전을 선언함으로써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후세인은 2003년 12월 13일, 자신의 고향 티크리트 부근의 동굴에서 체포되었다. 미국이 조종하는 이라크 과도정부는 재판절차를 거쳐 2006년 12월 30일, 후세인의 교수형을 집행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과거 걸프전쟁에서 거두지 못했던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전쟁이 걸프전쟁의 마무리라는 평가에 걸프전쟁의 승리가 빛을 바라는 듯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의 상황이었다.

이라크 안정화작전에 돌입한 미군은 무장세력이 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그로 인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공격 40여일 만에 전쟁의 종료, 즉 전쟁의 승리를 선포했지만 미국은 안정화작전이라는 더 큰 전쟁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은 결국 2010년 8월 31일,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시 종전을 선언하고 미군의 철수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라크공격을 시작한 2003년 3월 20일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종전선언까지 7년 5개월여 동안 4천4백여 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9천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소모했다.¹¹⁾ 그러고도 미국의 의지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2003년 5월 부시의 종전선언이 승리를 의미한 것이었다면 오바마의 그것은 ‘무승부’ 또는 ‘미국의 우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이라크 친미정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반미무장단체의 무력에 의해 붕괴된다면 이라크전쟁의 결과는 미국의 패배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이라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걸프전쟁의 승리가 더욱 값진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

11) 「국방일보」 보도, 2010년 9월 2일자 9면

2) 전쟁의 승패 평가이론과 분석요소 및 적용방법

위에서 사례로 제시한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쟁의 승패에 대한 평가는 다분히 당시 상황과 국제정세를 감안한 정성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경기에는 경기의 규칙(rule)과 그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umpire)이 있어 승자와 패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이 선언된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한다. 그러나 국가 간 또는 무장단체 간의 전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쉽지 않다.

고대의 전쟁은 대부분 집권세력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의 집권세력에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승패가 판가름 났다. 그 요인은 상대방의 무장세력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하거나 영토, 특히 수도를 점령해 상대 집권세력의 저항의지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방의 집권세력을 제거하거나 또는 강화조약에 의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함으로써 승자와 패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그 후 1800년대 나폴레옹에 의해 국민개병제가 도입되면서 총력전체제의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승패의 양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도 연합군이 추축(樞軸)국으로부터 항복을 받아 냄으로써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를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 그 중에서도 6·25전쟁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론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전쟁론(Vom Kriege)을 집필한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도, 간접접근 전략을 제시한 군사이론의 대가 리델하트(B. H. Liddell Hart: 1895~1970)도, 전쟁연구(A Study of War)를 집필한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 1890~1970)교수도 승자와 패자를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¹²⁾

12)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도 제4편 전투의 제7장에서 “전투의 승패, 또는 전투의 승패 결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승패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퀸시 라이트 교수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전쟁관련 연구자를 중심으로 전쟁의 결과를 사전에 도상(圖上)에서 예측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한 위게임(war game) 기법들이 개발되면서 객관화된 승패의 기준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¹³⁾ 그 예로 손자병법에서 제시한 5사7계(五事七計) 등의 요소를 적용해 전쟁의 결과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¹⁴⁾ 부분적으로는 앞서 제시한 전쟁의 종결조건과 시기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전쟁의 대비태세와 개전의 명분, 전쟁수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전쟁의 승패를 판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쟁의 승패 평가는 객관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요소를 선정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와 그 수단 중 하나인 전쟁의 분석은 국가를 행위의 단위로 보는 거시적 분석(macro analysis)과 함께 특정집단 또는 개인을 단위로 보는 미시적 분석(micro analysis)이 있을 수 있다.¹⁶⁾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방법도 사안에 따라 거시적·미시적 분석을 혼용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위의 베트남전·결프전·이라크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시적으로는 전쟁목적의 달성여부, 거시적으로는 전쟁의 명분과 전쟁이 전후 국가발전과 국제관계에 미친 영향분석이 될 것이다. 이를 요소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목적의 달성여부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전쟁의 목적과

전쟁연구(A Study of War)는 1979년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에서 『전쟁연구 병서연구 제7집』으로 번역 출간했다.

13) 진범주, “위게임 운용과 전쟁의 승패: 베트남전과 결프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p.22~47.

14) 송인영, 「5사(事)7계(計)로 본 결프전쟁의 평가 및 분석」, 『군사 제4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203~232. ; 국중태, “손자병법을 통한 전쟁의 승패 결과 분석: 5사·7계 및 궤도를 중심으로”, 해군대학 학생장교 논문, 1995. pp.171~210. ; 박용호, “전쟁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분석: 조직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pp.10~125.

15) 최복진, “사례를 통해 본 전쟁종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p.28~79.

16) 구영록, 『인간과 전쟁: 국제정치 이론의 체계』, 법문사, 1977. p.3.

수단으로 제시한 “적의 전투력, 적의 영토, 적의 의지”를 주요소로 선정할 수 있다.¹⁷⁾ 이 부분에 전쟁의 명분을 포함해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의 목적 평가는 순수하게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내용으로 한정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의 무력에 의해 상대방의 무장세력을 격파하고, 영토를 점령해 상대의 항복을 받아 내는 순서로 평가가 필요하다.

전쟁의 목적달성 여부는 시기적으로 통상 전쟁이 진행되는 중간에 또는 전쟁 직후에 적용되는 평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상대의 병력 및 산업시설에 대한 피해 정도, 영토의 점령, 특히 적국의 수도 점령여부, 전쟁지도부의 항복 및 체포 여부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와 분석은 다음의 두 번째 요소에 비해 비교적 협의의 미시적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쟁의 명분과 전후 국가발전 및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이다. 전쟁의 명분은 전쟁의 목적에 포함될 수도 있고 별도의 항목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의 영향과 함께 제시한 것은 그 평가가 보다 장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의 명분이 합당했느냐와 전쟁이 미친 영향은 보다 장기적, 거시적 관점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전쟁의 승패인식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 미시적으로 전쟁의 목적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과 함께 보다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전쟁명분의 타당성과 전후복구 및 국가발전, 국제관계의 증진 등의 전쟁이 미친 영향을 종합해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위의 요소 외도 다양한 평가요소와 방법을 적용해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6·25전쟁을 포함해 전쟁의 승패인식에 대한 복합적이고 계량화된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7) Carl von Clausewitz, 김만수 역, 『전쟁론(제1권)』, 갈무리, 2006, p.84.

3. 6·25전쟁의 도발주체와 승패 평가요소

“전쟁을 어느 편에서 먼저 시작했느냐?” 즉, 도발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전쟁의 전반적인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⁸⁾ 전쟁의 도발주체에 따라 전쟁의 목적과 명분은 물론 승패의 판정과 전쟁의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의 성격은 전쟁의 목적과 명분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종속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의 가장 상위개념으로 전쟁의 성격에 따라 전쟁목적이 선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과 성격을 각각의 요소로 선정해 이중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전쟁의 도발 주체를 전쟁의 목적 및 명분과 함께 분석한다면 전쟁의 성격은 자연스럽게 규정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백서도 앞서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6·25전쟁의 도발주체를 먼저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으로 국제전이면서 내전(內戰)과 같은 성격의 전쟁’이었다.”

국방백서가 발간되기 전, 대략 1990년대 초까지 만해도 6·25전쟁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시각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즉, “전쟁의 도발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의 시각을 놓고 “북침이다, 남침이다, 남침을 유도했다.”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¹⁹⁾ 남침설 내에서도 “김일성이 주도

18) 소련의 스탈린도 전쟁의 도발책임을 중요시했다. 북한의 김일성이 1949년 초부터 그에게 남침전쟁의 승인을 집요하게 요청지만 그는 미국과 충돌을 우려해 김일성의 요청을 매번 거절했다. 대신 스탈린은 이승만 군대가 북침을 해올 경우 반격에 한해 전면전쟁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19)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남침유도설 즉 수정주의 이론을 제기한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다(Who started the Korean War? This question cannot be answered)”라고 했다. ;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하고 스탈린이 지원했다.”는 주장과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 김일성이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난무했다.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한 집단안보 차원의 전쟁이었다.”라는 해석에서부터 “해방이후 지속되어온 한반도 내에서의 이념적 갈등의 연장이다.”라는 평가가 있는가하면, “내전에 대한 강대국의 개입이다.”라는 등의 다양한 평가가 있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국방백서의 내용에 대해 그 타당성과 배경을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6·25전쟁은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일으켰다는 것이다. 과거에 제기되었던 “북침설, 남침설, 남침유도설”의 논란은 1994년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극비자료로 관리되고 있던 6·25전쟁 관련문서를 제공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나아가 최근엔 러시아 및 중국의 교과서에도 남침사실이 수록된 것을 확인한바 있다.²¹⁾

따라서 남은 문제는 도발의 주체가 “스탈린이냐, 김일성이냐”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관련문서의 공개에 따라 김일성이 누차 스탈린에게 남침의 승인을 간청했으며, 김일성의 제안을 만류하던 스탈린이 1950년 4월 초에 남침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²²⁾ 따라서 “도발주체가 김일성이며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2010국방

20) 외교통상부 사료, “한국전쟁관련 소련 극비외교 문서(2)”, 암호전문, 군사편찬연구소 사료실, 1998, p.1.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크레믈린을 방문했을 때 당시 엘친 러시아대통령이 구 소련정부의 극비외교문서를 제공한 것은 통상적인 외교관례를 넘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러시아 그 같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그들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있었다. 1991년 북방외교를 추구하던 노태우 정부가 구 소련정부에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엘친 대통령은 한국과 차관상환 문제를 유리하게 타결하면서 추가적인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극비외교문서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21) 1974년 발간된 러시아의 대학교재는 6·25를 ‘북침’이라고 기술하고 있었으나 2008년 발간된 신판교재는 ‘남침’으로 정정했다. : 「조선일보」 보도자료, 「전쟁기념관」 6·25전쟁 60주년 전시자료

22)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탈리아 바자노바 공저,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도서출판 열림, 1998, pp.53~54.

백서』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6·25전쟁이 “내전인가, 국제전인가”의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앞선 시기에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했던 김학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동서 양대진영의 냉전이 그 축소판인 한반도에서 열전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국제전에 내쟁(內爭)이 겹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는 동서의 국제냉전이 남북의 국내내쟁을 가져오고 남북의 국내 냉전이 국제냉전을 악화시키면서 양자가 상승·복합작용을 거듭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²³⁾

김학준의 설명에 따르면 “한반도 외부의 국제적 여건이 세력팽창의 돌파구로 한반도를 택함으로써, 6·25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쟁이 강대국들의 정책목표에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시작할 당사자들이 없었다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스탈린 역시 미국과 같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지 않아 북한의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 스탈린의 입장이 바뀐 것은 1950년 1월에 들어서였다.²⁴⁾ 따라서 6·25전쟁은 한반도 내부에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었고, 김일성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반영해 국방백서는 6·25전쟁의 성격에 대해 “국제전이면서 내전과 같은 성격의 전쟁”으로 다소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다. 따

23) 김학준, 「한국전쟁」, 『군사 제20호: 한국전쟁 제40주년 특집』,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pp.34~35.

24) 기광서(조선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46~1948년까지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원은 무성이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은 1947년 10월 4일자 내각회의 결정을 통해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의 유지비를 북한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 놓았다. 스탈린의 그 같은 결정은 자국의 전후복구가 시급했고, 동유럽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군사 제63호: 6·25전쟁 기념 특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p.89~90 ; 외교통상부 사료, “한국전쟁관련 소련 외교극비문서(4)”, 암호전문, 1998, pp.17~33.

라서 국방백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다면 6·25전쟁은 ‘한반도 내부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 국제전적 내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4. 6·25전쟁의 승패 평가요소별 분석

일반적으로 6·25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란”으로 평가된다. 그중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란이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내용은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장차 유사한 사태의 예방과 민족통합을 위한 교훈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제시된 평가요소를 적용해 분석하되 전개 순서를 바꾸어 전쟁의 명분, 전쟁의 목적, 전쟁의 영향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전쟁의 명분

전쟁의 명분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따라서 전쟁명분은 무력을 사용해 상대를 완전하게 제압한 경우에도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 일으켜 먼 훗날까지 전쟁의 승패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합당한 명분은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며 적의 사기를 저하시켜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반대의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유사한 사례는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배경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5) 최용호, 『6·25전쟁의 실패사례와 교훈』, 육군본부, 2004, pp.451~452.

그러나 전쟁 개입에 관한 명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려 오다가 1941년 12월, 일본군의 진주만기습을 계기로 비등해진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참전을 선언했던 것이다. 1965년 베트남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60년을 전후해 미국은 자신들이 베트남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4년 8월, 통킹만에서 자국의 함정이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왔던 것이다.

6·25전쟁 시 북한이 내세운 명분은 “미제의 식민지인 남반부를 해방시킨다.”는 소위 적화통일전략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남침전쟁은 이념전쟁인 동시에 통일전쟁이면서 “남반부를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킨다.”는 독립전쟁의 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전쟁의 명분은 앞서 설명과 같이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하며 상대방의 지도층을 제외한 대대수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타당한 명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명분은 김일성 등 북한 집권세력의 의지였을 뿐 북한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국제사회의 지지도 소련과 중국 등 소수 공산권국가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그들이 진정으로 한민족의 통일을 원해서라기보다는 냉전구도 속에서 미국과 자유진영을 의식한 결과였다.

한편 김일성과 박헌영 일당은 남한의 주민들이 그들의 전쟁명분에 동조해 그들이 남침을 시작하면 대규모 무장봉기로 호응할 것을 기대했으나 그것은 오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침도발은 소수의 집권층과 소련·중국 등 일부 공산권국가의 지지를 얻는데 국한된 것으로 타당한 전쟁명분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전쟁이 성공했다면 그들의 전쟁명분도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산화 통일된 중국·베트남 등의 사례를 볼 때 고려할 가치가 없는 궤변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쟁의 목적

전쟁은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제국주의전쟁(영토확장, 식민지쟁탈, 이권 확보), 독립전쟁, 통일전쟁, 종교전쟁, 이념전쟁, 권력쟁탈전쟁(종족, 권력 획득을 위한 내전 등), 그리고 다른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전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²⁶⁾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도 위의 분류와 같이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나 한반도와 주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쟁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를 완전히 점령해 자신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다. 베트남전쟁 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사회주의공화국을 수립한 사례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해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편입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는 통일전쟁, 권력쟁탈전쟁, 이념전쟁 등과 복합된 목적을 가진 전쟁이 발생했다. 6·25전쟁 시 김일성이 달성하고자 했던 그와 목적도 유사했다.

둘째, 상대의 일부지역, 또는 자원을 탈취하는 제한전쟁의 경우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의 러·일전쟁과 같은 사례다. 1945년 정부수립 이후에도 전면전쟁의 전초전과 같은 양상을 가진 국지전쟁이 개성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셋째, 상대를 식민지화하거나 또는 위성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쟁, 또는 앞으로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쟁으로 1627년의 정묘호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형태의 전쟁이다.

이상과 같은 3가지 형태의 전쟁을 고려할 때 전쟁이 “어느 쪽의 의지로 시작되었는가!”의 문제는 전쟁의 승패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쟁을 도발하는 공격자는 명확한 전쟁목적을 선정한 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방어자의 입장은 상대의 도발을 저지해야

26) 온창일, 『전쟁론』, 집문당, 2008, pp.21~42. 구영록, 『인간과 전쟁: 국제정치 이론의 체계』, 법문사, 1977, pp.147~180.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달성 여부는 전쟁을 도발한 공격자(攻者)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6·25전쟁 시 북한의 도발목적은 위에 제시한 첫 번째의 형태와 같이 남한을 완전히 점령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²⁷⁾ 따라서 수세적 입장에 있던 남한의 응전목적은 당연히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전쟁의 목적과 그에 따른 전쟁의 성격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변화될 수 있다. 6·25전쟁 기간 중 남북한 모두의 전쟁목적은 그런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전쟁 초기 즉 개전 당시에 선정된 전쟁의 목적은 전쟁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개전 당시 북한의 전쟁목적을 중심으로 전쟁결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²⁸⁾

(1) 전투력의 파쇄 및 전쟁의 피해

전쟁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다.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폭력행위(무력)를 수단으로 적의 무장력을 격파하고 적의 저항력의 기지가 되는 영토를 점령해 저항의지를 말살하는 것이다.²⁹⁾ 따라서 전쟁은 가공할 파괴력을 지니게 되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면서 영토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그 피해는 전투에 참가하는 군 병력은 물론 주민들의 생명과 생존의 배경이 되는 재산과 환경까지도 파괴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 특히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더욱 어렵다.

최근에는 정밀장비 및 수단을 이용한 공중관측 등으로 상대방의 움직임과 현상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전쟁에 임하는 군인과 이를 지원하는 국민들의 사기를 위해 아군의 피해는 줄이고 전과는 부풀리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있다. 6·25전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2001, pp.133~137.

28) 외교통상부 사료, “한국전쟁관련 소련외교극비문서(2)”, 함호전문, 1998, pp.1~4.

29) Carl von Clausewitz, 김만수 역, 『전쟁론(제1권)』, 갈무리, 2006, p.84.

않았다. 휴전 후 58년이 지났지만 그 피해를 정확하게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많은 유사 통계자료가 난무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방백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피해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제시된 통계자료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표 1〉 6·25전쟁의 피해현황

국군 및 유엔군 인명피해

단위: 명

구 분	계	전사·사망	전상·부상	실종·포로
계	776,360	178,569	555,022	42,769
한국군	621,479	137,899	450,742	32,838
유엔군	154,881	40,670	104,280	9,931

※ 공산군 피해(추정): 1,773,600여 명(사망·부상: 1,646,000명, 실종·포로: 127,600명)

민간인 피해

단위: 명

계	학살·사망	부상	납치·행방불명	실종·포로
990,968	373,599	229,625	387,744	피란민: 320만, 전쟁미망인: 30만, 전쟁고아: 10만

※ 북한민간인 피해(추정): 150만여 명

자료: 국방부, 『2010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10, p.249.

위의 자료를 기초로 6·25전쟁 기간 중 남·북한의 피해를 비교해 보면 북한의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1/2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 미치는 피해 정도는 남한의 그것과 결코 비교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남한의 피해통계는 그 동안의 각종자료를 통해 계속 보완해 왔기 때문에 사실과 근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의 그것은 추정치에 불과해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의 양상

을 고려할 때 남한의 피해는 대부분 적의 전투병력 및 무장세력과 직접적인 충돌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반면 북한지역에는 유엔공군에 의한 무자비한 폭격이 전쟁기간 내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피해는 남한의 그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였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9월 28일 수복 시까지 3개월 동안 북한의 치하에서 미처 피난길에 나서지 못한 많은 시민이 학살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 등 북한의 인구 밀집 지역을 지배한 기간은 북한의 그것에 비해 훨씬 짧았다. 따라서 국군 및 연합군이 북한지역을 지배하는 동안 발생한 민간인 피해는 북한이 남한에서 저지른 악행과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이다.

인명피해에 추가해 재산 및 기간시설의 피해도 엄청났다. 남한지역에서만 해도 당시 화폐기준으로 320억 달러로 추정되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당시 북한지역은 남한에 비해 공업화가 훨씬 앞서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산업시설은 유엔공군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 따라서 재산 및 기간시설의 피해도 북한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북한의 피해는 인명중시 사상 면에서 자유진영보다 그 강도가 덜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행복을 강요할 정도의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유엔공군의 공중공격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인내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1951년 후반기부터 조기휴전을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³⁰⁾

결과적으로 북한은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전쟁의 목적 중 상대 전투력의 파쇄 및 전쟁의 피해요소로 평가해 볼 때 남한에 비해 그들 자신의 피해가 훨씬 컸다. 따라서 그들은 전투력의 파쇄 및 전쟁의 피해요소에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투력의 파쇄 및 전쟁의 피해가 전

30)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군사 제63호: 6·25전쟁 기념 특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p.106~108 ; 외교통상부 사료, “한국전쟁관련 소련의 교극비문서(4)”, 암호전문, 1998, pp.17~33.

쟁의 승패 판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영토의 점령

전쟁 시 영토는 전투력을 생산해 내는 기지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상대방의 영토 점령은 상대가 전투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지를 박탈하는 것이며, 자신의 전투력을 생산하는 기지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를 점령하는 것은 심리적인 면에서 그 영향이 지대하다.

남침을 감행한 북한군의 목표는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해 남한의 전 영토를 석권하는 것이었다. 그 같은 목적에 따라 북한군은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 3개월 동안 주민들을 통치하면서 10만여 명의 전투병력과 30만여 명의 노무자를 동원해 전선해 투입했다. 따라서 북한군은 1950년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아군의 낙동강방어선 공격에 투입된 병력의 절반 정도를 서울에서 징집한 병력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인천상륙작전으로 3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지역으로 진격해 1950년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했지만 12월 4일 중공군에게 밀려 철수했다. 따라서 아군의 북한지역 점령은 기간이 너무 짧았고, 유엔군과 이승만 정부의 군정체제 조차도 정비되지 않아 북한지역에서 전투력을 동원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또한 그럴 의도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군의 철수과정에서 6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피란민이 남쪽으로 피란함으로써 북한군의 잠재적인 전투력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어 1951년 중공군의 제6차 공세(5월 공세) 이후 휴전이 논의되면서 양측은 현재의 휴전선 인근에서 치열한 고지쟁탈전에 돌입했다. 그 결과 아군이 개성을 포기한 대신 동부지역에서 38도선을 넘어 북상함으로써 보다 많은 영토를 차지한 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두고 볼 때 북한은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전쟁의 목적 중 영토의 변화 그 자체로서 6·25전쟁의 승패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큰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도발했던 북한의 목표가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전쟁목적은 달성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 전쟁의 의지

1950년 4월, 스탈린과 회담한 김일성과 박헌영은 그들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 남한지역에서 30만여 명의 게릴라가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아울러 그들이 서울을 점령할 경우 남한의 전쟁지도부가 항복하거나 또는 강화협상에 응해올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남한 지역에서 북한군을 지원하는 조직적인 게릴라활동은 발생하지 않았다.³¹⁾ 이승만 정부도 부산까지 피란하기는 했지만 초기에 북한군과 협상하거나 나중이라도 항복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물론 유엔군의 참전이 예상보다 조기에 성사되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남한의 전쟁지도부가 북한군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남한 주민의 대다수도 결코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군은 초전에서 남한의 전투병력 대부분을 무력화하고 1950년 8월 초에는 낙동강일대까지 진출하면서 남한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남한의 전쟁지도부와 주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특히 휴전을 결정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 이승만이 자신의 정권을 걸고 끝까지 반대하면서 반공포로를 석방해 6월 초로 예상되고 있던 정전협정 조인을 불발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반면 김일성은 1951년 후반기부터 휴전의 조기성사를 원했던 것으로 볼 때 북한군은 전쟁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전쟁의 목적 중 전쟁수행 의미 면에서 북한은 남한에서 많은 동조자가 발생해 그들을 지원하는 게릴라

31) 외교통상부 자료, “한국전쟁관련 소련외교극비문서(3)”, 압호전문, 1998, p.29.

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남한의 전쟁 지도부와 주민의 저항의지를 조기에 말살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그들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전쟁의 목적 즉 3개 요소 중 어느 하나도 그들의 도발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에 의한 단기적·미시적 평가에서도 김일성과 북한이 그들의 승리를 주장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3) 전쟁의 영향

(1) 남한에 미친 영향

6·25전쟁은 남한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따라서 전후(戰後) 남한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사 이래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전쟁으로 인해 강요된 변화요인들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모두에게 시련을 안겨준 부정적인 면이 컸다. 그러나 남한의 국민과 정부는 그것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이 같은 변화요인과 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외교의 변화다. 정치적으로 6·25전쟁은 남한의 반공보수의 토대가 되었다. 10만여 명에 불과했던 국군은 60만 대군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경찰력도 증강되면서 안보체제가 강화되었다. 안보우선주의가 힘을 얻게 되면서 반공노선은 지위를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6·25전쟁 이전 남한사회에 남아있던 사회주의 노선이나 민주사회주의노선은 모두 공산주의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흑백논리적 풍조 속에서 중도주의 노선의 기반이 약해졌다.

외교적으로는 남한의 친미·친서방화·친UN화를 촉진시켰다. 특히 미국은 한·미안보동맹을 통해 후견국의 위치를 굳혔으며, 한 동안 국내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세계정책을 그대로 따랐으며, 미국의 반공정책보다 더욱 강경한 반공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 같은 대·내외적 상황에서 6·25전쟁 직전까지도 지지기반이 취약했

던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 자신의 정권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휴전반대운동을 장기간 주도하고 반공포로를 과감히 석방하는 등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국부(國父)화하는 등으로 1952년 부산 정치파동에서 얼룩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는 1952년 제2대 대통령의 당선에 이어 1956년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장기 독재의 길을 열었다.³²⁾

둘째, 사회·문화·의식의 변화다. 6·25전쟁은 남한인구의 재배치를 몰고 왔다. 전쟁이전부터 시작되어 1950년 12월 북진했던 국군과 유엔군의 철수대열을 따라 대규모의 북한주민들이 월남했다. 이어 1950년 1월의 1·4후퇴로 인해 중부권 인구가 대규모로 강제 이동됐다. 이어 전후북구가 시작되면서 도시화로 인한 인구이동으로 남한 주민은 종래에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에 정착한 인구와 북한에서 월남한 주민들이 뒤섞여 향약(鄉約)과 같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양반(兩班)제도에 의한 뿌리 깊은 봉건체제도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전화(戰禍)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존의 신분질서가 붕괴되면서 국민은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되었고 그것은 문화·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독교가 과거 대원군시대에 형성되었던 거부감을 극복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전쟁에 의한 문화·의식구조가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³³⁾ 최근 긍정적·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빨리빨리 문화’도 전후에 형성된 행동양식이었다.

셋째, 경제·생활의 변화다. 전쟁의 참화는 열악한 상태에 있던 국가 기간사업 시설과 함께 개인의 재산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대다수의 국민이 미국 등 자유진영의 원조물자에 의존해 생활해야 할 만큼 빈곤은 극에 달했다. 그 같은 어려움은 국민의 허리띠를 더울 졸라매게 했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생활전선에 나서야 했다. 과거의 기득권에 안주하다가는

32) 김학준, “한국전쟁”, 『군사 제20호: 한국전쟁 제40주년 특집』,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pp.40~41.

33)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한국 개신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한울아카데미, 2003, pp.20~39.

굶어죽기 십상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기반상실과 함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시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벅찼다. 이로 인해 1960년대까지 국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정책이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봉건주의적 잔재가 무너지면서 시장경제 질서에 의한 산업자본이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미국 등 우방국의 지원은 경제발전의 기초를 제공했다.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등의 정치적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반공보수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안정도 국민과 국가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전란이 가져온 심리적 불안과 초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반공이념을 심어 주어 반공보수정부의 기치에 적극 동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61년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6·25의 연장선상에서 베트남과 병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유입된 막대한 외화를 원동력으로 삼아 경제발전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다.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배경이 6·25전쟁의 참화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표 2>와 같이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P)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남북한의 국민소득(1인당 GNP) 변동 추이

(단위: 달러)

구분	1953	1955	1957	1959	1965	1969	1975	1977	1980	1985
남한	67	67	74	81	105	210	594	1,011	1,597	2,242
북한	58	66	85	117	162	194	415	520	766	766
대비	1.2	1.0	0.9	0.7	0.6	1.1	1.4	1.9	2.1	2.9

자료 : 통계청, 『대한민국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서울, 통계청, 1998, p.304.

결과적으로 6·25전쟁은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국가의 위치를 확보하고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물론 그것은 1945년 해방과 1948년 건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후 한국의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면에서 국민과 국가를 역동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 비약적인 속도의 발전을 거듭하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서 6·25전쟁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북한에 미친 영향

북한 역시 남한 만큼은 아니지만 6·25전쟁의 영향은 지대했다. 그 첫 번째는 김일성의 독재체제 구축이다. 전쟁 이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월남하기 시작했지만 북진했던 국군과 유엔군의 철수대열을 따라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남으로 대거 이주함으로써 김일성은 쉽게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김일성은 정권 내의 도전세력을 제거하는데 6·25전쟁을 활용했다. 그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7월 30일, 부수상 겸 외상 박헌영과 사법상 이승엽을 비롯한 전 남로당 간부 13명을 체포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명은 “미제와 공모해 정권을 전복한 후 자산계급의 민주정부를 수립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정권 창설 시부터 최대의 도전세력이었던 국내파를 제거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³⁴⁾

이어 1956년에는 ‘8월 종파사건’³⁵⁾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제거함으

34) 박헌영 일파를 체포한 김일성과 그의 추종세력은 박헌영을 제외한 12명을 재판에 회부해 8월 6일 10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박헌영에 대한 재판은 계속 미루어 오다가 2년 후인 1955년 12월 3일 기소되어 12월 15일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날 이후 북한에서 남로당 계열의 김일성 경쟁세력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 김창희, 『북한 정치사회의 이해』, 법문사, 2006, pp.55~57.

35) ‘8월 종파사건’은 북한 역사상 유일무이한 조직적인 반 김일성운동 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사회는 김일성 비판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김일성 일파는 김일성 중심의 명실상부한 단일지도체제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북한지도부는 1958년 3월 6일 로동당 제1회 당대표자대회를 소집해 종파청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반종파투쟁을 마무리했다. :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77~79. : 김창희, 『북한 정치사회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6, pp.58~61.

로써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완성했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이 내세운 명분은 반미주의였다. 미국을 최대의 원수로 설정하고 남한을 미제가 강점한 식민지로 규정한 다음 미제의 추방을 통해 식민지 해방을 위해 자신과 북한로동당에 절대복종할 것을 강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김일성은 6·25전쟁을 자신의 독재체제를 구축하는데 철저하게 활용했다.

김일성 독재하의 북한은 강력한 행정력과 강제동원력을 발동해 조기에 전후복구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시기에 북한은 사회주의화 정책을 더욱 가속화해 1958년까지 기존의 개인경영 상공업과 개인농업을 없애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했다. 사회구조를 완전한 사회주의체제로 바꾼 것이다.

그 과정에서 1965년 북한의 국민 1인당 GNP는 남한의 105달러에 비해 165달러로 월등히 우세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는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초기의 전후복구 시기에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지만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은 1965년을 정점으로 점차 남한에 뒤지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식량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오늘날과 같은 독재 및 세습체제가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이 6·25전쟁을 활용해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한 결과였다. 또한 김정일의 선군정치 등 군사모험주의 역시 6·25전쟁으로부터 연유된 것이며, 경제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남한이 6·25전쟁에 의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했다면 북한은 정적의 숙청과 독재체제 구축 등 부정적인 측면에서 작용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제정치 및 역학구도에 미친 영향

6·25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세력구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 공산주의 확산의 불길을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스탈린이 “남침을 감행하겠다.”는 김일성의 간청을 승인한 것은 공산주의를

남한까지 확산시켜 소련의 위성국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신속한 참전결정도 공산주의 확산의 불길을 진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6·25전쟁을 세계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불안정했던 세계질서가 6·25전쟁을 통해 냉전체제를 구축하고, 냉전체제하에서 안정을 찾게 된 전쟁이었다. 그 결과 도미노처럼 번져가던 세계 공산화의 물결이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6·25전쟁은 베트남전쟁과 함께 세계 공산화의 불길을 진화하는데 기여한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6·25전쟁이 남·북한과 국제정치에 영향을 고려할 때 어느 편이 승리하고, 어느 편이 패배했는가의 답은 명확해진다. 결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10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浮上)하게 된 배경과 북한이 국민들의 식량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세습·독재체제의 국가로 전락한 배경이 모두 6·25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5. 결 론

전쟁의 승패에 대한 평가는 종전 또는 휴전의 시점에서 전쟁의 목적달성 여부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쟁은 국민과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전쟁의 명분과 영향까지 감안한 평가도 반영되어야 한다. 6·5전쟁의 승패에 대한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재해석 되어야 한다.

6·25전쟁이 정전협정에 의해 멈춘 후 양측은 각각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의 평가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이었다.”라는 개념에 기초해 ‘무승부’라는 평가가 정설로 되어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정전협정의 시점에 근거를 둔 평가다. 또한 동족 간에 발생한 아픈

상처를 덮어두자는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는 전쟁의 책임과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방백서는 6·25전쟁 60주년을 기해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차원의 재해석으로 과거의 ‘무승부 주장’과 다르게 6·25전쟁을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전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방백서의 재해석은 국민은 물론 전문연구자들에게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방백서에 수록된 6·25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검증을 통해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의 목적에서 제시한 ‘상대 전투력의 파쇄, 영토점령, 저항의지 말살’ 등의 3개 요소와 함께 전쟁의 명분, 전쟁이 국민과 국가에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6·25전쟁의 승패인식을 재조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전쟁의 목적 달성 여부다. 전쟁을 도발한 북한군은 개전 초기 국군의 주력을 무력화하고 서울을 점령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남한의 주민과 전쟁지도부의 저항의지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전쟁의 3개 목적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둘째, 전쟁의 명분이다. 전쟁의 명분은 자국의 주민은 물론 상대의 주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제시한 명분 즉 “미제의 식민지상태에 있는 남조선의 해방”이라는 명분은 김일성 등 소수 북한 지배층의 주장이었을 뿐 남한의 주민은 물론 북한의 주민들에게조차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셋째, 전쟁의 결과가 국민과 국가발전에 미친 영향이다.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남한은 전쟁에 의해 야기된 변화를 역동적으로 수용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반면 북한은 전쟁의 결과를 반대파를 제거하는 구실로 삼아 김일성 독재 및 세습체제를 구축했다. 이어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군사적 모험주의는 국민들의 식량문 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로 만들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감안해 볼 때 『2010국방백서』가 제시한 6·25 전쟁의 성격 및 승패에 대한 평가는 적절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의 주제에서 의문을 제시한 것처럼 ‘무승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국민 모두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토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면서 전쟁에 대한 인식과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11. 9. 5,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6·25전쟁, 전쟁의 성격, 전쟁의 목적, 전쟁의 명분, 전쟁의 영향, 전쟁의 평가, 전쟁의 결과, 전쟁의 교훈, 정전협정, 2010국방백서

<ABSTRACT>

Spoils of War: Revisiting the Outcome of the Korean War

Han, Kwan-soo

After the Korean War (1950~1953), both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North Korea (NK) have claimed they won the war. However, more recently the war has been evaluated as “the tragedy of fratricidal war without neither a winner nor a loser”. That is, it is widely accepted now that the war finished a tie.

In contrast, according to The Defense White Paper 2010, in which the war was reinterpreted in commemoration of its 60th anniversary, the victory belonged to liberal democracy.

This study attempts to add new light to the outcome of the Korean War. By sharing ideas used by the famous German military theorist, Carl von Clausewitz, this study develops three factors as a means to analyze the war. Clausewitz believed in putting the enemy out of action, occupying enemy territory, and annihilating the will of resistance, while focusing on the justification of war with respects to the effects of the war on the people and the nations involved. From these beliefs, the following three factors are created in order to re-analyze the Korean War.

Analysis of NK's accomplishments show that NK military forces dominated Seoul, destroying the main forces of the ROK troops. However, NK failed to accomplish any of three major objectives of war as mentioned earlier. NK could not break the resistant will of the ROK people and their leaders.

Furthermore, the NK justification of war, “the liberation of ROK from the USA” was not convincing enough even to their own people. It was a

justification insisted solely by a few NK leaders including Kim Il-sung.

Lastly and most importantly, th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the war on the people and nations involved show that ROK rapidly rose as one of the ten global economic powers by actively accepting democratic changes, whereas NK established a system of power succession by eliminating all political opposition. This military adventurism taken by Kim Il-sung and followed by Kim Jung-il resulted in the rogue state nation which is plagued by hunger and poverty.

These results support the evaluation of the war suggested in The Defense White Paper 2010.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e ROK Government will share this knowledge with its people and encourage them to take part in active discussions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ROK's past and current national security issues.

Key Words : Korean War,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ar, Objectives of War, Justification of War, Effects of War, Evaluation of War, Lessons Learned from War, Cease-fire Agreement, The Defense White Paper 2010.